

# 재 정 학

##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다.
- ②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된다.
- ③ 우리나라는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④ 우리나라는 매입세액공제방식을 따른다.
- ⑤ 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 2. 세수함수 $T = -400 + 0.5Y$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단, $T$ : 세금, $Y$ (소득) $> 800$ 이다.)

ㄱ. 소득 증가 시 평균세율 증가    ㄴ. 소득크기에 관계없이 한계세율 일정  
ㄷ. 세수탄력성  $< 1$                     ㄹ. 한계세율  $<$  평균세율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3. 개인소득세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 ②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공제의 실제 조세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 ③ 어떤 재화 구입비의 소득공제는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④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 ⑤ 세액공제의 결정액은 한계세율과 관계없다.

## 4.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간 선택에서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 ②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 ③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공공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 ④ 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 ⑤ 비대응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②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 ③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 ④ 자본재 구입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투자에 불리하다.
- ⑤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 것이다.

6.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진소득세에서 실질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 ②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 ③ 기업 차입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에 유리하다.
- ④ 선형누진 소득세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 ⑤ 감가상각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커지게 한다.

7.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 ② 임금률이 높아지는 경우
- ③ 임금총액이 커지는 경우
- ④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는 경우
- ⑤ 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8.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화주의학파: 경제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비해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ㄴ. 케인즈학파: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하면 승수효과만큼 총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ㄷ.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ㄹ. 러너(A. Lerner):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ㅁ. 배로(R. Barro): 적자재정이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9.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 ②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 ③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능력이 적으니 조세를 적게 부담해야 한다.
- ④ 주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세 부과는 편익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 ⑤ 인근 공원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10.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②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소득효과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 ③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 ④ 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 ⑤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나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분명하게 늘린다.

11.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부부		개인소득	과세단위별 소득세액	
			개인기준	가족기준
A	유○○	0.5억원	500만원	5000만원
	이○○	1.5억원	3500만원	
B	박○○	1억원	2000만원	5000만원
	전○○	1억원	2000만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 ①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 ②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 ③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 ④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 ⑤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12. 누진세에 관한 찬반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세할 수 있는 구멍(loophole)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 ②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반대한다.
- ③ 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성한다.
- ④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누진세를 찬성할 수 있다.
- ⑤ 밀(J. S. Mill)의 동등희생의 원칙에는 누진세를 찬성하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13.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② 법인세 특별감가상각제도는 조세지출의 예이다.
- ③ 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 ④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예이다.
- ⑤ 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14.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 저축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와 저축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 저축에 대한 영향은 시점 간 자원배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 미래소비보다 현재소비가 유리한 여건이 제공될 수 있다.
-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5. 어떤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P = 200 - Q$ 이고,  $MC$ 는 40이다. 이 때 단위당 60의 종량세를 이 기업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가격은 120에서 150으로 상승한다.
- ②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450이다.
- ③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1200이다.
- ④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3000이다.
- ⑤ 시장의 거래량은 80에서 50으로 줄어든다.

16. 하버거(A. Harberger)는 아래 가정 하에 조세귀착의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1차동차(선형동차)이고 X와 Y의 요소 집약도는 동일하다.
-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주어져 있고, 이 생산요소들은 완전한 이동성을 갖는다.

- ① X부문과 Y부문에 대한 동일 세율의 물품세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 ② X부문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 ③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 ④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 ⑤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17.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최대부하가격설정에서 비성수기에는 공공요금을 한계비용에 일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 ㄴ.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없다.
- ㄷ.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다.
- ㄹ. 램지가격설정방식은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ㅁ.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8.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가가 정상채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 ② 여가가 정상채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 ③ 여가가 열등채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 ④ 여가가 정상채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 ⑤ 여가가 정상채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19.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 ② 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 ③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④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 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ㄴ.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ㄷ.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ㄹ. 오우츠(W. Oates)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ㅁ. 지방분권제도가 중앙집권제도보다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이 높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1.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 ②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 ③ 어떤 자원배분 상태에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⑤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22.  $A$ 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_A$ 와  $U_B$ , 사회후생을  $W$ 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배분상태가 효용가능경계상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개  
선시킬 수 없다.
- ②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평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하면 롤즈(J.  
Rawls)적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 ③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W = \min\{U_A, U_B\}$ 로 나타낼 수 있다.
- ④ 사회후생함수가  $W = U_A + 2U_B$ 일 경우,  $B$ 의 효용이  $A$ 의 효용보다 사회적으로 2배의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 ⑤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23.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② 중립세는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 ③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 ④ 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한 민간부분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자연독점기업에 대한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24. 기업  $A$ 와  $B$ 는 현재 각각 500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의 저감비용은  
각각  $C(q_A) = 40 + \frac{1}{2}q_A^2$ ,  $C(q_B) = 30 + q_B^2$ 이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A$ 에 400단위,  $B$ 에 300단위의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한다면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ㄱ)배출권의 가격과 (ㄴ)배출권 거래량은?  
(단,  $q_i (i = A, B)$ 는 기업  $i$ 의 배출 저감량이다.)

- ① ㄱ: 100, ㄴ: 100단위      ② ㄱ: 100, ㄴ: 200단위      ③ ㄱ: 200, ㄴ: 100단위
- ④ ㄱ: 200, ㄴ: 200단위      ⑤ ㄱ: 250, ㄴ: 100단위

25. 개인  $A$ 와  $B$ 로 구성된 경제에  $X$ 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  
수는 각각  $U_A = 3\sqrt{X_A}$ ,  $U_B = \sqrt{X_B}$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 로 가정할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단,  $X_i > 0 (i = A, B)$ 는  
개인  $i$ 의  $X$ 재 소비량이다.)

- ① 15      ② 30      ③ 60      ④ 90      ⑤ 100

**26.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술적 외부성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 ② 코즈(R. 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 ③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④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금전적인 외부성의 예이다.
- ⑤ 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27.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클럽재는 부분적으로 경합성의 성질을 가져 혼잡을 발생시키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 ② 순수공공재의 경우 소비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영(0)이다.
- ③ 공공재의 최적 공급수준은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
- ④ 클라크 조세(Clarke tax)에서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 ⑤ 가치재는 순수 공공재에 해당된다.

**28. 공공선택에서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반수제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투표의 역설이 있다.
- ② 최적다수결제의 경우 의사결정비용은 의결에 필요한 표수가 클수록 커진다.
- ③ 린달(E. Lindahl) 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 ④ 전략적 행동이 없을 경우,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점수투표제이다.
- ⑤ 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29.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개별 기업이 결정한 배출량의 합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배출량과 일치한다.
- ② 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 ③ 환경세에 비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 ④ 배출권 거래 시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구매자가 된다.
- ⑤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진다.



34.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재정수입 달성	ㄴ. 시장실패의 보완
ㄷ. 보험료에 의한 자원 조달	ㄹ.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5.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각 기관의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 ㄱ )라고 부른다. ( ㄱ )는 유사한 일을 하는 부서 간에 예산편중 중복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 ( ㄴ )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부서들이 하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을 따르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①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영기준 예산제도  
 ②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③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④ ㄱ: 프로그램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⑤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36.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② 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④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  
 ⑤ 센(A. Sen)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의 도출이 가능하다.

37.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로렌즈곡선을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으로 접근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정책 성격을 갖는다.  
 ③ 현금보조, 물품보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④ 로렌즈곡선,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로 분배의 불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⑤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

**38. 정부지출 증가 원인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 ①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 ② 보몰(W. Baumol): 사회적 격변기에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보았다.
- ③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부캐넌(J. Buchanan): 정부지출의 편익이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과대평가되므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설명하였다.
- ⑤ 바그너의 법칙: 1인당 국민소득 하락 국면에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39.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파레토기준을 충족한 투자계획만을 채택한다.
- ② 공공부문의 투자계획 타당성 판정에만 적용된다.
- ③ 현재가치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과 일치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 ④ 현재가치법은 어떤 투자계획의 채택가능성을 평가할 뿐이며, 투자계획들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 ⑤ 내부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인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계획은 기각된다.

**40.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88년에 시행되었다.
- ② 최초 법적 기반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 ③ 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9%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다.
- ④ 2022년부터 1인 이상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 ⑤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매보증에 있어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② 공매보증은 금전,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 ④ 채납자는 제3자의 명의로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 ⑤ 관할 세무서장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 ② 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채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 ③ 채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④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채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 ⑤ 관할 세무서장은 채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그 재산에 관한 채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48.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채납자의 감치와 관련된 설명 중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채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채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 ㄱ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 ㄴ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 ㄷ )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채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① ㄱ : 2, ㄴ : 1, ㄷ : 1      ② ㄱ : 2, ㄴ : 2, ㄷ : 2      ③ ㄱ : 2, ㄴ : 2, ㄷ : 3
- ④ ㄱ : 3, ㄴ : 1, ㄷ : 2      ⑤ ㄱ : 3, ㄴ : 1, ㄷ : 3

49.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상 2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ㄷ.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ㄴ, ㄷ, ㄹ

50.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②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③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④ 조세 포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 ⑤ 재산의 은닉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51.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1) 국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8,000,000원
- (2)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한 국채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6,000,000원
- (3) 국내은행으로부터 받은 정기에금이자: 3,000,000원
- (4)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7,000,000원
- (5)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
- (6)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3,000,000원

- ① 23,330,000원    ② 23,880,000원    ③ 26,660,000원    ④ 26,880,000원    ⑤ 32,880,000원

52.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주식양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1) 甲의 주식양도 및 취득현황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양도일자	취득일자
주식a	500,000,000원	100,000,000원	2022.12.5.	2017.5.7.
주식b	100,000,000원	148,000,000원	2022.10.3.	2018.8.2.

(2) 주식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국내 주권비상장법인 (주)A가 발행한 주식이며, 甲은 (주)A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취득한 후 양도전까지 계속 보유하였다.

(3) 주식b는 중소기업이 아닌 미국법인 (주)B가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다.

(4) 주식a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2,150,000원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3,350,000원, 주식b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회사 위탁매매수수료 3,000,000원을 직접 지출하였다(법정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됨).

(5) 甲은 주식a와 주식b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주)A와 (주)B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6) 위에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68,200,000원    ② 70,250,000원    ③ 83,000,000원    ④ 85,250,000원    ⑤ 98,000,000원

53. <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A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22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단, 甲은 (주)A의 발행주식총수의 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기본급과 상여: 50,000,000원

(2) 시간외근무수당: 8,000,000원

(3) (주)A의 소유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5,000,000원

(4) 식사대: 2,400,000원  
(월 200,000원×12개월, (주)A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5) 甲의 8세 아들의 보육과 관련하여 (주)A로부터 지급받은 보육수당: 1,200,000원(월 100,000원×12개월)

(6) 「발명진흥법」에 따라 (주)A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8,000,000원

- ① 60,400,000원    ② 62,200,000원    ③ 63,400,000원    ④ 64,600,000원    ⑤ 68,400,000원

54. <소득세법>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2022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보험료세액공제액과 교육비세액공제액의 합계는?

(1) 기본공제대상자 현황			
구분	나이	소득현황	지출내역
본인	43세	총급여액 50,00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2,000,000원 일반보장성보험료(피보험자: 본인) 500,000원
배우자	40세	총급여액 4,000,000원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 12,000,000원
모친	65세	이자소득 5,000,000원	대학교 등록금 10,000,000원
아들	18세	소득없음	고등학교 교복구입비용 1,000,000원 사설 영어학원 수강료 3,000,000원
딸	15세	소득없음	중학교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 2,000,000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수익자: 딸) 3,000,000원

(2) 딸은 장애인이고,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다니고 있다.

(3) 위에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330,000원      ② 585,000원      ③ 645,000원      ④ 660,000원      ⑤ 1,935,000원

55.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 ② 비거주자는 법령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⑤ 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56.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 ②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이 5분의 1인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④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된다.
-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탁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57.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②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 ⑤ 거주자로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8백만원인 자는 9백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58.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
- ②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③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 ④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법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 10으로 한다.

59.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품의 판매: 그 제품을 인도한 날
- ② 제품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 ③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결산을 확정할 때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날
- ⑤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로 하되,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

60.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이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써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61.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이다.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③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62.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중 영리내국법인 (주)B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을 결의(2022.3.15.)함에 따라 무상주를 수령하였다.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이 다음과 같을 경우 (주)A의 의제배당금액은? (단, (주)A는 (주)B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원(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자기주식소각이익: 5,000,000원(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음)
-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원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000,000원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1,000,000원
- 재평가적립금: 1,400,000원[토지분(재평가세 1% 과세분) 400,000원과 건물분(재평가세 3% 과세분) 1,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

(2) (주)B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다.

- ① 1,785,000원    ② 2,685,000원    ③ 2,835,000원    ④ 3,135,000원    ⑤ 3,435,000원

63.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으로 한다.
- ③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야 한다.
- ⑤ 중소기업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한다.

64. <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이다. (주)A는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 (주)B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 2020.1.1. (주)B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주)A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제22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B로부터 외국법인세 원천징수세액 200,000원 차감 후 배당금 1,800,000원을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1,800,000원            (대) 배당금수익 2,000,000원  
       선급법인세 200,000원

(2) (주)B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소득금액은 5,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외국법인세는 1,000,000원이다.

(3) (주)A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50,000,000원이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다.

- ① 150,000원      ② 170,000원      ③ 200,000원      ④ 250,000원      ⑤ 300,000원

65. <법인세법>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임원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손금불산입금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주)A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으며, 제22기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0인이다.  
 (2) (주)A는 리스회사인 (주)B에서 제22기 초에 운용리스(리스기간 3년)로 임원전용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였다.  
 (3) 제22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비용
리스료 (상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30,000,000원
- 자동차보험료	3,000,000원
- 자동차세	2,000,000원
- 수선유지비	1,750,000원
기타 유지비	3,000,000원

(4) 제22기 사업연도 운행기록: 총 주행거리 20,000km, 업무용 사용거리 15,000km

- ① 8,250,000원    ② 10,750,000원    ③ 17,687,500원    ④ 18,750,000원    ⑤ 24,750,000원

66.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67. <법인세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의 합계금액은? [단, 각 항목은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포함)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재무상태표 자산계정 중 매출채권은 150,000,000원이다. 이 금액에는 당기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주)A는 제22기에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4,000,000원과 그 취득세에 관한 가산세 1,000,000원을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토지 105,000,000원 (대) 현금 105,000,000원

(3) (주)A는 2022년 초 (주)B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주식 취득일 현재 (주)B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은 100,000,000원이고 순자산가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주)A는 2022.5.18. (주)B로부터 현금배당 500,000원을 받았으며, 2022년 말 (주)B가 당기순이익을 보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2022.5.18.>

(차) 현금 500,000원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500,000원

<2022.12.31.>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2,000,000원 (대) 지분법이익 2,000,000원

- ① 3,000,000원    ② 5,000,000원    ③ 5,500,000원    ④ 7,000,000원    ⑤ 7,500,000원

68. <법인세법> 다음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A의 제22기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단, (주)A는 매년 법인세를 감면받아 왔고, 계산결과는 원 단위 미만에서 절사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일: 2020.1.1.  
 (2) 취득가액: 50,000,000원

구 분	제20기 (2020.1.1.~12.31.)	제21기 (2021.1.1.~12.31.)	제22기 (2022.1.1.~12.31.)
감가상각비 장부금액	20,000,000원	0원	8,000,000원

(3)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한 바 없다.  
 (4) 기준내용연수: 10년  
 (5) 내용연수 10년의 감가상각률

정액법	정률법
0.100	0.259

(6) 제20기와 제21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① 889,402원      ② 902,352원      ③ 1,804,402원      ④ 2,696,352원      ⑤ 2,980,402원

69.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을 발행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③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⑤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70.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③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④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⑤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7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규로 제조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⑤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 ②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 ③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
- ④ 사업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 ⑤ 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73.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2.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022.1.5.에 계약금으로 2,000,000원, 2022.2.20.에 중도금으로 4,000,000원, 2022.4.30.에 잔금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받기로 한 날 발행하기로 하였다.
- (2) 특허권을 2022.4.2.부터 2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2022.3.30.에 대가의 일부로 받은 1,000,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3) 2022.2.2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2022.2.20.)와 대금의 지급시기(2022.4.5.)를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용역제공을 완료한 때는 2022.7.10.임).
- (4) 2022.3.25.에 특수관계인에게 산업상의 지식에 관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시가는 3,000,000원이다.

- ① 4,000,000원    ② 6,000,000원    ③ 7,000,000원    ④ 9,000,000원    ⑤ 12,000,000원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도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③ 외국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로서 원생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 ④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 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 경우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75.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거래내역이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2022.4.2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2022.7.5.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2,000,000원이다.
- (2) 2022.5.1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1,000,000원이다.
- (3) 2022.5.25.에 매입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기계설비의 매입세액은 5,000,000원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과세사업 공급가액	면세사업 공급가액
2022.1.1.~3.31.	160,000,000원	100,000,000원
2022.4.1.~6.30.	330,000,000원	110,000,000원

- ① 2,500,000원    ② 4,500,000원    ③ 4,750,000원    ④ 5,500,000원    ⑤ 5,750,000원

76.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라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가감할 금액은? (단, 법령상 신고 등의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2020.1.1.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채권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2022.4.5.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2) 2021.3.1.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으로 확정된 매출채권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22.5.10.에 회수하였다.  
 (3)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1,980,000원이었고, 2022.6.15.에 해당 대손 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 ① 520,000원 차감                      ② 1,080,000원 차감                      ③ 1,800,000원 가산  
 ④ 1,980,000원 가산                      ⑤ 3,580,000원 가산

77.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일반사업자 (주)A가 (주)B에게 임대하고 있는 3층 건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소재)에 관한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임대현황(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음): 건물 1층 상가 100m<sup>2</sup>, 건물 2층 주택 100m<sup>2</sup>, 건물 3층 주택 100m<sup>2</sup>, 부수토지 1,500m<sup>2</sup>  
 (2)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임대료로 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수령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438,000,000원이다(임대기간은 2021.1.1.~ 2022.12.31.이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귀속은 불분명함).  
 (3)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건물 300,000,000원, 토지 500,000,000원  
 (4)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로 가정한다.

- ① 15,215,000원    ② 17,516,500원    ③ 19,455,000원    ④ 20,322,000원    ⑤ 22,822,500원

7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작성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없다.
- ③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공급일을 덧붙여 적은 후 감소된 금액을 검정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④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을 말한다.
- ②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거주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그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④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납세의 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적정기간”)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 ③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적용한다.
- ④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 ⑤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